

AURI POLICY UPDATES

건축도시 정책동향

Vol. 28
2015. 5

건축도시분야 정책 Updates (2015.4.1~4.30)

건축문화 부문

- 국토부, 신진건축사 대상 7건 공모
- 서울시, '누리공간만들기 시민·학생 공모전 2015' 개최
- 서울시, '2015 공공디자인 시민공모전' 개최
- 충북도, '제4회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 부산시, '2015년 국가 도시재생 선도지역 도시재생대학' 운영
- 경남도, 경상남도 우수주택 선정, 전시회 개최
- 부산시, '제24차 열린부산·도시건축포럼' 개최
- 대전시, '제19회 도시·건축 규제개혁 아카데미' 개최
- 서울시, '세운상가군 심포지엄' 개최
- 전남도,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개최
- 인천시, '2015년 제2회 공공디자인위원회' 개최

녹색 건축·도시 부문

- 국토부, 2015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대상 선정
- 광주시,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에 선정
- 인천시,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민간 사업자 공모
- 강원도,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 집중 조명
- 2015년 1분기 건축 인허가면적, 전년 동기 보다 24.3% 증가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 국토부, 건축물 안전제도 개선
- 국토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국토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치안정책연구소와 한국셉테드학회 MOU체결 및 공동학술세미나 개최
- 부산시, 2015 범죄예방 안심마을 4곳 조성
- 부산시, 국토부 추진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
- 울산시, 국토부 추진 '2016 도시재생 공모사업' 참여
- 세종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주민공청회 개최
- 대전시, 원도심 활성화 시민 공모사업 프로그램 추진
- 서울시, 보편적 지원과 맞춤형 주거재생 실행방안 발표
- 인천시,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 울산시,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 착수
- 전남도, 주민 주도형 디자인마을 가꾸기 본격 추진
- 충남도, '2015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대상지 선정
- 부산시, '보도정비기본계획 용역' 시행
- 부산시, '공장건축물 경관색 가이드라인' 제정
- 부산시,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
- 대전시,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축심의 기준' 폐지



월간 건축도시정책동향

2015년 5월호 (통권 28호)

-
- 발 행 :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 발행일 : 2015. 5. 26
 - 발행인 : 제해성
 - I S S N : 2288-274X
 - 편집·인쇄 : 알래스카인디고(주)
 - 기 획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B동 706-1호
 - 연락처 : 031-478-9845
 - 이메일 : kslee@auri.re.kr(이경신)
-

건축도시분야 정책 Updates

- 5 이달의 정책 Highlights
- 6 정책유형별 동향분석

건축문화 부문

- 8 국토부, 신진건축사 대상 7건 공모
- 8 서울시, '누리공간만들기 시민·학생 공모전 2015' 개최
- 9 서울시, '2015 공공디자인 시민공모전' 개최
- 10 충북도, '제4회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 10 부산시, '2015년 국가 도시재생 선도지역 도시재생대학' 운영
- 11 경남도, 경상남도 우수주택 선정, 전시회 개최
- 12 부산시, 제24차 열린부산·도시건축포럼 개최
- 12 대전시, 제19회 도시·건축 규제개혁 아카데미 개최
- 12 서울시, '세운상가군 심포지엄' 개최
- 12 전남도,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개최
- 12 인천시, '2015년 제2회 공공디자인위원회' 개최

녹색건축·도시 부문

- 13 국토부, 2015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대상 선정
- 13 광주시,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에 선정
- 14 인천시,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민간 사업자 공모
- 14 강원도,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 집중 조명
- 15 2015년 1분기 건축 인허가면적, 전년 동기 보다 24.3% 증가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 17 국토부, 건축물 안전제도 개선
- 17 국토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18 국토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18 치안정책연구소와 한국셉테드학회 MOU체결 및 공동학술세미나 개최
- 19 부산시, 2015 범죄예방 안심마을 4곳 조성
- 19 부산시, 국토부 추진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
- 20 울산시, 국토부 추진 '2016 도시재생 공모사업' 참여
- 20 세종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주민공청회 개최
- 21 대전시, 원도심 활성화 시민 공모사업 프로그램 추진

- 21 서울시, 보편적 지원과 맞춤형 주거재생 실행방안 발표
- 22 인천시,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 22 울산시,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 착수
- 23 전남도, 주민 주도형 디자인마을 가꾸기 본격 추진
- 23 충청도, '2015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대상지 선정
- 24 부산시, '보도정비기본계획 용역' 시행
- 24 부산시, '공장건축물 경관색 가이드라인' 제정
- 25 부산시,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
- 26 대전시,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축심의 기준' 폐지

이달의 정책 Highlights

건축문화 부문

이달의 건축문화 관련 보도자료에서는 공공디자인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소식이 중점적이었다.

공공디자인 사업과 관련해 충청북도와 서울시는 '2015년도 공공디자인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인천시는 '제2회 공공디자인위원회' 개최 소식을 알렸다.

도시재생과 관련해 부산시는 '2015년 국가 도시재생선도지역 도시재생대학' 운영 관련 소식을, 서울시는 세운상가 국제설계공모와 관련한 '세운상가군 심포지움' 개최 소식을 알렸다.

녹색건축도시 부문

녹색건축·도시와 관련한 보도자료에서는 '그린리모델링', '제로에너지빌딩', '친환경에너지타운'에 대한 사업공모 및 시범사업대상 선정·발표 소식이 중점적이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2015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대상 건축물' 선정자료를 발표했으며, 인천시는 '제로에너지 시범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소식을, 강원도는 홍천시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 관련 향후 계획 및 사업내용에 대한 정보를 안내했다.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국토환경디자인 관련 보도자료에서는 꾸준히 도시재생과 범죄예방사업과 관련한 소식이 이어졌다.

부산시와 울산시가 '국토부 추진 국가 지원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고, 세종시는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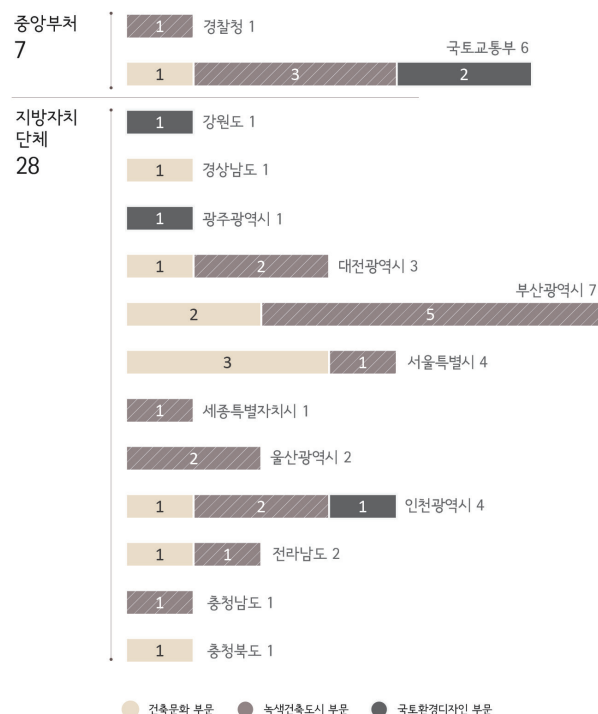


정책유형별 동향분석

2015년 4월 한 달 동안 수집 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도시 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보도자료는 총 35건이다.

이 중 국토부와 경찰청 등 중앙부처에서 7건(20.0%)의 보도자료가 수집되었고, 국토부에서 6건(17.1%), 경찰청에서 1건(2.9%)의 보도자료가 수집되었다.

17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경북, 전북, 경기, 대구, 제주를 제외한 12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28건(80.0%)의 보도자료가 수집되었다. 이 중 부산시가 7건(20.0%), 서울시와 인천시가 각각 4건(11.4%)의 정책사업을 발표해 부산, 서울, 인천은 타 지역에 비해 건축·도시 분야 정책사업이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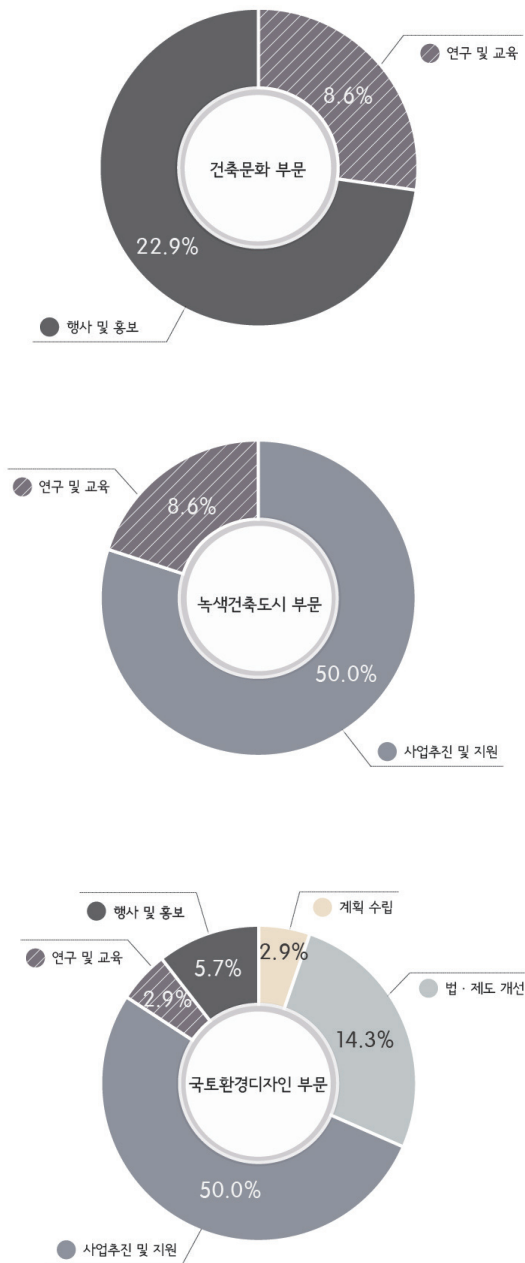


부문별로는 전체 35건 중 19건(54.3%)이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에 해당하는 보도자료로, 국토부에서 3건(8.6%), 경찰청에서 1건(2.9%)의 정책사업을 발표했고, 나머지 15건(42.9%)은 부산시에서 5건(14.3%)의 정책사업을 발표하는 등 지자체의 발표자료가 대부분이었다.

이밖에 ‘건축문화’ 부문의 보도자료가 11건(31.4%), ‘녹색건축도시’ 부문의 보도자료는 5건(14.3%)인 것으로 정리되었다.

주관부처	건축문화 부문	녹색건축도시 부문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부문별 합계
중앙부처				
경찰청	—	—	1(2.9%)	1(2.9%)
국토교통부	1(2.9%)	2(5.7%)	3(8.6%)	6(17.1%)
합계 (중앙부처)	1(2.9%)	2(5.7%)	4(11.4%)	7(20.0%)
지방자치단체				
강원도	—	1(2.9%)	—	1(2.9%)
경상남도	1(2.9%)	—	—	1(2.9%)
광주광역시	—	1(2.9%)	—	1(2.9%)
대전광역시	1(2.9%)	—	2(5.7%)	3(8.6%)
부산광역시	2(5.7%)	—	5(14.3%)	7(20.0%)
서울특별시	3(8.6%)	—	1(2.9%)	4(11.4%)
세종특별자치시	—	—	1(2.9%)	1(2.9%)
울산광역시	—	—	2(5.7%)	2(5.7%)
인천광역시	1(2.9%)	1(2.9%)	2(5.7%)	4(11.4%)
전라남도	1(2.9%)	—	1(2.9%)	2(5.7%)
충청남도	—	—	1(2.9%)	1(2.9%)
충청북도	1(2.9%)	—	—	1(2.9%)
합계 (지방자치단체)	10(28.6%)	3(8.6%)	15(42.9%)	28(80.0%)
총 계	11(31.4%)	5(14.3%)	19(54.3%)	35(100.0%)

■ 주관부처별 정책동향



분야별로 보도자료 35건 중 14건(40.0%)은 ‘사업추진 및 지원’과 관련한 보도자료였으며, 10건(28.6%)은 ‘행사 및 홍보’와 관련한 보도자료였다.

이밖에 ‘법·제도 개선’과 ‘연구 및 교육’과 관련한 보도자료가 각각 5건(14.3%), ‘계획수립’과 관련한 보도자료가 1건(2.9%)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문화 부문」에 해당하는 보도자료 중에서는 ‘행사 및 홍보’ 관련 보도자료와 ‘연구 및 교육’ 관련 보도자료가 각각 8건(22.9%), 3건(8.6%)이었으며, 「녹색건축도시 부문」에 해당하는 보도자료 중에서는 ‘사업추진 및 지원’과 ‘연구 및 교육’ 관련 보도자료가 각각 4건(11.4%), 1건(2.9%)이었다.

전체 보도자료 35건 중 19건(14.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의 보도자료에서는 ‘사업추진 및 지원’ 관련 보도자료가 10건(28.6%)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제도 개선’ 관련 보도자료가 5건(14.3%), ‘행사 및 홍보’ 관련 자료가 2건(5.7%), ‘계획수립’과 ‘연구 및 교육’ 관련 보도자료가 각각 1건(2.9%), 2건(5.7%)씩 이었다.

세부 분야	건축문화 부문	녹색건축 도시부문	국토환경 디자인부문	분야별 합계
계획수립	—	—	1(2.9%)	1(2.9%)
법·제도 개선	—	—	5(14.3%)	5(14.3%)
사업추진 및 지원	—	4(11.4%)	10(28.6%)	14(40.0%)
시스템 구축	—	—	—	—
연구 및 교육	3(8.6%)	1(2.9%)	1(2.9%)	5(14.3%)
행사 및 홍보	8(22.9%)	—	2(5.7%)	10(28.6%)
총 합계	11(31.4%)	5(14.3%)	19(14.3%)	35(100.0%)

■ 세부분야별 정책동향



국토부, 신진건축사 대상 7건 공모 공공 건축에 부는 젊은 건축사의 창의 바람~, 공공분야 신진건축사 설계공모 진행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국토교통부는 만 45세 이하의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신진건축사 설계공모」를 올해 7건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의 「신진건축사 설계공모」 중 가장 먼저 공모하는 철곡군의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지역의 사회취약계층에 체계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5,500㎡의 대지에 연면적 약 2,900㎡로 조성되며 약 7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4월 20일(月)에 공고되어 5월 30일에 접수 마감하며, 철곡군 관계자 및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6월 5일 최종 당선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모는 설계작의 출품 없이 공모 참여 설계예정자의 역량 및 설계 계획·방법 등과 같은 설계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안공모방식을 적용해 신진건축사들의 공모 참여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본 공모와 함께 수원시의 청소년 문화의 집, 김천시 주민센터 등을 비롯한 올해 계획된 추가 6건의 신진건축사 설계공모를 연중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 '우리공간만들기 시민·학생 공모전 2015' 개최

고가도로 하부, 오래된 공공시설 등 이용도가 낮은
공공장소 활용방안 제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서울시는 시내 고가도로 하부, 지하철역 내부 빈 공간, 보행통로 등 현재 잘 활용되지 않는 도시 공간을 새롭게 변신시킬 다양한 일반시민과 전문가의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총 상금은 2천만 원 규모로 5월 18일(월)부터 22일(금)까지 참가신청서와 아이디어 설명 자료를 접수한다.

서울시는 경제·사회가 발전하면서 더 많은 여가·휴식 공간에 대한 시민 요구는 커지고 있는 반면에 도심 속 가용지가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여,

이용이 저조한 공공장소를 시민 스스로 발굴하고 이 장소를 어떤 식으로 바꾸면 좋을지에 대한 시민 아이디어로 공간을 재해석, 창의적 공간들을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고 이 공모전의 취지를 설명했다.

참가신청서 및 아이디어 설명자료 작성요령과 자세한 응모 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 및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04.19.



■ 공공장소 활용 예시 이미지 공공장소 활용 예시 이미지

2015.04.20.

서울시, '2015 공공디자인 시민공모전' 개최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생활 속 휴식공간을 쾌적한 도시공간으로 탈바꿈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은 「2015 공공디자인 시민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의 공모주제는 '서울 도심 속 함께하는 휴식공간'.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다양한 도시공간 프로젝트와 조화를 이루는 벤치·의자, 그늘막의 디자인을 공모하며,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공간이자 향후 서울을 상징하는 공공공간에 어울리는 작품을 디자인하여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서울시 내 생활과 밀접한 주변 공공공간을 활기차고 즐거운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시민 스스로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2015 공공디자인 시민공모전 포스터

2015.04.26

충북도, '제4회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충북도는 13일, '제4회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고 새로운 측면에서 공간의 가치를 재발견하여 보다 나은 삶의 터전을 조성하고 조화로운 경관을 창출하고자 추진되었으며, '유기농 특화도 충북'의 정체성에 어울리는 '자연과 함께하는 디자인'을 주제로 한다.

공모분야는 '공공 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디자인 등 4개 부문이다. 출품 수는 2점(개인 및 팀당) 이내, 작품접수는 오는 9월 9~11일까지 충북도 공공디자인 홈페이지(pubdesign.cb21.net)에서 1차 접수한다.

2차 접수는 10월 5~8일까지 방문 및 우편접수를 통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으로, 최종 수상자는 10월 16일 발표한다.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홈페이지

2015.04.13.

부산시, '2015년 국가 도시재생 선도지역 도시재생대학' 운영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국 도시재생과

부산시는 '부산 원도심 재창조를 위한 창조경제플랫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4월 18일, '2015년 국가 도시재생 선도지역 도시재생대학' 개설, 7월 25일까지 격주 토요일마다 동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설되는 '국가 도시재생 선도지역 도시재생대학'은 도시재생 사업추진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해 당사자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리로 초량동 상업지구팀, 초량동 주거지구팀, 좌천범일팀, 수정동팀, 공무원역량강화특별팀 등 총 5개팀 60여 명이 참여하게 된다.

도시재생대학의 운영은 부산시, 동구, 경성대학교, 부산디자인센터, 부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며, ‘국가 도시재생 선도지역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사업’의 사업총괄코디네이터인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석환 교수가 총괄한다.

팀별 지도교수는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유재우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건축학부 오광석 교수, 일신설계종합건축사사무소 김승남 사장, 동의대학교 건축학과 신병윤 교수, 前 부산시 도시재생과 임기규 과장이 맡아서 진행하게 된다.

시에서는 이번 도시재생대학에서 발표되는 최종 성과물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에 반영해 사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5주 이상 참석자는 부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예비활동가로 인정을 받게 된다.

2015.04.17.

경남도, 경상남도 우수주택 선정, 전시회 개최 4월부터 우수주택 시군 순회 전시 실시

경상남도 도시교통국 건축과

경남도는 4월 6일부터 창녕군을 시작으로 8월 21일까지 2014년도 도내 각 시군에서 완공된 단독주택 중 우수주택으로 선정된 40동의 건축물에 대해 시군 순회 전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선정된 우수주택을 판넬로 제작하여, 시군청 로비, 민원실 등 도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에 전시하고, 의병제전, 한방약초축제 등 지역축제행사와의 연계 전시하

여 도민 관심도를 높일 계획이다.

순회전시 판넬에는 우수주택 사진, 도면, 설계자, 건축비 등을 상세히 공개하여 새로운 주택 건축에 관심이 많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경상남도 우수주택은 경상남도 홈페이지(www.gsnd.net)-도시교통국-우수주택에도 게재되어 있으며, 도 홈페이지에는 2009년 우수주택부터 올해 우수주택까지 확인할 수 있다.

■ 경상남도 우수주택



■ 기타 건축문화 소식

2015.4.17.

제24회 열린부산·도시건축포럼

국제회의장 12층
(주최) ㈜상지이앤에이/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관) 부산광역시

2015.4.24.

제19회 도시·건축 규제개혁 아카데미

대전시청 세미나실
(주최) 대전광역시

2015.4.25.

세운상가군 심포지엄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주최, 주관) 한국도시설계학회
(후원) 서울특별시

2015.4.9.~4.12.

제4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영암 목재문화체험장
(주최) 전라남도, 영암군
(주관) 한옥건축박람회추진위원회

2015.4.15.

제5회 공공디자인위원회 개최

인천시청 영상회의실
(주최)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도시 부문

국토부, 2015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대상 선정

2015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대상 33곳에 18억 원 지원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국토교통부는 33개 공공건축물을 ‘2015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시공지원사업 부문에 서귀포 의료원 등 5개소와 사업기획지원사업 부문에 태백석탄박물관 등 28개소를 선정하여 총 18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시행자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관련 전문가와 합동으로 에너지평가,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사후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 시범사업대상 건축물

시공지원사업 (5개, 총 9.5억원 이내 지원)	서귀포 의료원, 광주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남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국회의사당
사업기획지원사업 (28개, 총 8.5억원 이내 지원)	태백석탄박물관, 광주광역시 남구 대촌동 주민센터,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청사, 흑석체육센터, 시흥시청사, 한국폴리텍대학 달성캠퍼스 기숙사, 충주시청사, 인천항 연안 여객터미널, 충북대 제2학생회관, 구립관악청소년회관, 창원대 경영대학, 정부대전청사, 태백시청사,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서영여고 본관동, 아산시청사, 부여군청사, 전주 완산소방서, 공주대 공주캠퍼스 구)대학본부, 제주대 농업생명자원과학대학 1호관, 정부서울청사 본관, 부경대 청운관, 양주시 문화예술회관, 남울산 우체국, 한국교원대 교양학관, 평창군청사, 부산세관 본관, 서초구민회관

2015.04.13.

광주시,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에 선정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광주광역시는 국토교통부 추진 ‘201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에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조성사업」이 시공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는 지난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을 기리기 위해 전국적인 모금운동을 통해 건립된 건물이라는 역사적 상징성과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도서관에서 청소년 직업체험공간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점에서 사업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받았다.

한편,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조성사업은 동구 충장로에 위치한 옛 학생회관 건물을 친환경적으로 리모델링해 청소년특화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113억원(국비 87억, 시비 26억)이 투입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현재 기본설계가 추진되고 있다.

시는 기존 공사 추진 방식과는 달리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위한 공간계획과 운영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위탁운영자를 조기에 선정했으며, 설계단계에서부터 운영자가 설계자, 관계 공무원, 시의회(환경복지위원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며 설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민·관협치의 창의행정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2015.04.13.



인천시,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민간 사업자 공모 선도형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으로 친환경·저탄소 성공모델 만든다

인천광역시 환경녹지국 녹색기후정책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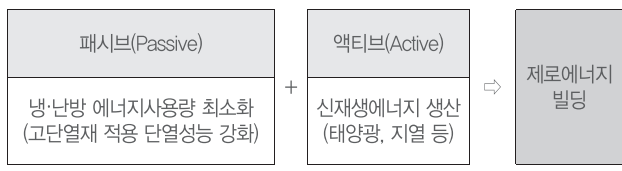
인천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모범도시 구현을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4월 2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송도국제도시 일원에 8층 이상 고층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최적화 수단 및 경제성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시장 선도형 성공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제로에너지빌딩 신축을 계획 중인 개인 또는 기업·법인, 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부동산개발업자 등에 신청자격이 있다.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 건축기준 완화, 세제감면을 지원하고, 인천시가 행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제로에너지 빌딩의 개념》

외피단열, 외부창호 등 단열성능 극대화 및 지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2015.04.13.

강원도,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 집중 조명 정부녹색성장위원회 사업현장 방문, 격려

강원도 환경과

4월 30일, 정부녹색성장위원회 이승훈(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9명이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에 조성 중인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은 작년 10월 국내에서 최초로 착공되었으며, 주요시설은 금년 말까지 설치 완료하여 사업성과를 조기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국내 최초로 가축분뇨를 도시가스로 전환하여 사업장 소재 마을에 공급할 예정이며, 이 밖에도 퇴·액비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상·하수도 설비, 꽃길 및 홍보관 조성 등 에너지·환경·관광의 융합사업을 추진 중이다.

당초에는 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주민반대가 심해 난항을 겪기도 하였으나, 마을이장(지진수)의 적극적인 주민설득과 이에 따른 주민들의 동참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한다.

2015.04.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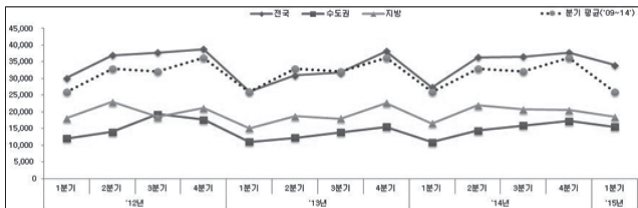
2015년 1분기 건축 인허가면적, 전년 동기 보다 24.3% 증가

착공은 22.2% 증가, 준공은 11.1% 감소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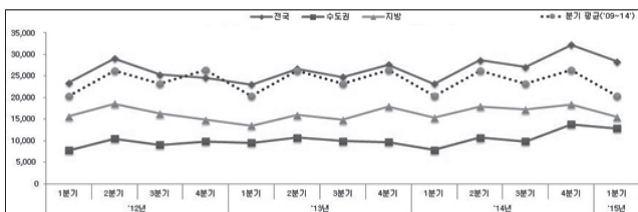
국토교통부는 '15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보다 24.3% 증가한 33,999천㎡, 동수는 5.3% 증가한 52,930동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 허가면적은 수도권 15,510천㎡(4,646천㎡, 42.8% ↑), 지방 18,488천㎡(2,006천㎡, 12.2% ↑)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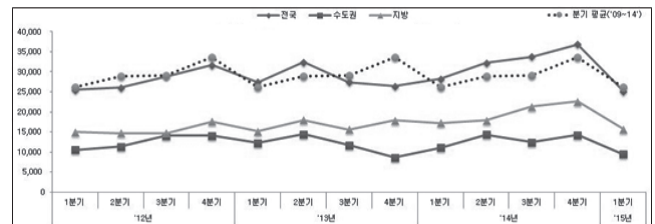
■ 분기별 인허가 추이

착공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22.2% 증가한 28,361천㎡, 동수는 8.2% 증가한 43,730동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2,876천㎡(4,983천㎡, 63.1% ↑), 지방 15,485천㎡(176천㎡, 1.2% ↑)로 나타났다.



■ 분기별 건축물 착공 추이

준공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1.1% 감소한 25,136천㎡, 동수는 1.4% 감소한 42,520동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9,461천㎡(△1,602천㎡, 14.5% ↓), 지방 15,674천㎡(△1,519천㎡, 8.8% ↓)로 나타났다.



■ 분기별 건축물 준공 추이

전년 동기 대비 건축물 용도별 허가, 착공 및 준공면적은 건축 허가면적은 주거용 13,816천㎡, 상업용 10,077천㎡, 공업용 3,381천㎡, 문교사회용은 2,531천㎡로서 각각 33.5%, 28.1%, 0.7%, 34.3% 증가하였다.

착공면적은 주거용 24,628천㎡, 상업용은 26,690천㎡, 공업용 3,208천㎡로서 각각 29.7%, 25.0%, 6.1% 증가한 반면, 문교사회용은 1,521천㎡로서 0.7% 감소하였다.

준공면적은 주거용 9,812천㎡, 상업용 6,439천㎡, 공업용 3,540천㎡, 문교사회용은 2,003천㎡로서 각각 1.8%, 0.4%, 24.2%, 41.3% 감소하였다.

2015년 1분기 주요특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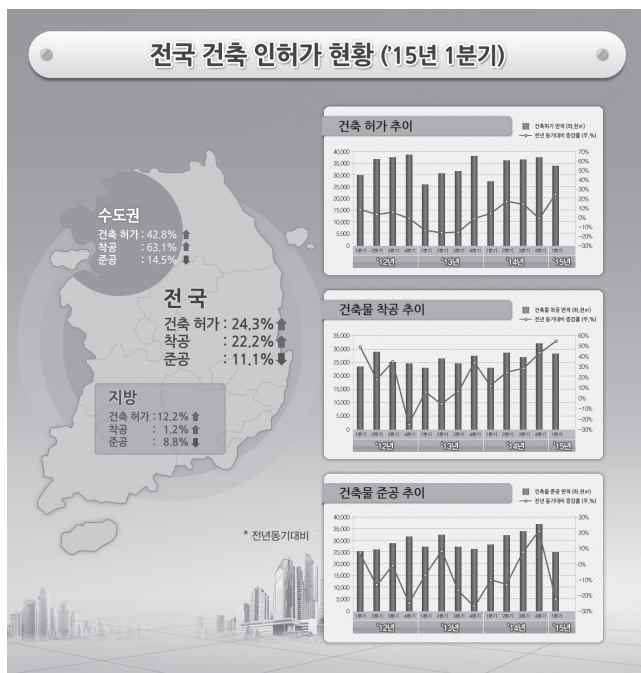
첫째, 전년 동기 대비 주거용 건축물의 허가(33.5%) 및 착공(29.7%) 면적은 증가한 반면, 준공(△1.8%) 면적은 감소하였다. 특히, 수도권의 허가(57.5%) 및 착공(100.9%) 면적 증가폭이 지방(허가 18.3%, 착공 1.5% 증가)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녹색건축도시 부문



둘째, 전년 동기 대비 상업용 건축물의 허가(28.1%) 및 착공(25.0%) 면적은 증가하였으며, 준공(△0.4%) 면적은 소폭 감소하였다. 세부 용도별로 살펴보면 건축 허가는 업무시설(67.8%), 착공은 판매시설(91.7%), 준공은 판매시설(29.0%)의 증가율이 높았다.

셋째, 전년 동기 대비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의 허가(297.6%), 착공(58.8%) 및 준공(472.6%) 면적이 크게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3873.3%)의 허가면적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지방은 경상남도(202.9%)의 허가면적 증가가 두드러졌다.



■ 2015년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

2015.04.28.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국토부, 건축물 안전제도 개선

초고층, 특수구조, 소규모 건축물 등 맞춤형 안전제도 마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국토교통부는 초고층, 특수구조, 소규모 건축물 등 건축물 안전제도가 국민체감형으로 개선된다고 밝혔다.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허가시에 주변대지의 안전까지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고, 불에 타지 않는 내부 마감재로 기준은 2층 이하 소규모건축물에도 적용된다.

다중이용건축물의 범위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에서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된다.

건축관계자의 처벌도 강화되어, 부실 공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건축시공자 업무수주를 즉시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Out) 제도가 도입되고, 경제적 제재 수준도 1천만 원 수준에서 3억 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건축물의 소유자도 2년이하의 징역 등 형사 처벌 될 수 있다.

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샌드위치패널, 단열재 또는 철근 등을 사용 또는 공급하다가 국토교통부의 불시 점검에 적발될 수 있고, 이 경우 재시공뿐 아니라 6개월간 건축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대책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각계 전문가로 “건축물 안전 포럼”을 구성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안전취약분야를 발굴·개선하고, 해외 모범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물안전제도를 확립하고 관련 안전기술 발전을 위해 안

전산업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PEB, 환기구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것을 지시 하였으나 아직까지 개선조치를 하고 있지 않는 민간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금년 5월까지 가시적인 개선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고발조치할 것을 일선 허가권자에게 지시하였다.

2015.04.13.

국토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가속사 건폐율 완화 및 토지거래허가제 간소화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토지정책과

국토교통부는 2015년 1월 6일 공포, 7월7일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심 내 건설되는 행복기숙사의 용적률이 상향되는 등 건축규제가 일부 완화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취득 시 토지거래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단축되는 등 도시부분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4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15.04.13.



국토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민간임대주택에도 주택기금 및 공공택지 지원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국토교통부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1.13대책 후속조치(핵심개혁과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제17차 국무회의(15.4.28)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국민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 받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보지 않고 민간임대주택으로 본다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주택기금·공공택지 지원을 받더라도 민간임대로 보아 규제완화)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예외를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임대주택법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금출자나 공공택지를 지원받더라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하는 규정 마련

이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간주될 경우 임대유기기간(5~10년)과 임대료 상승제한(연 5%)만 적용받고 그 밖에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조건 신고의무위반 등 경미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로 전환됨에 따라(14.5.28, 임대주택법 개정),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실제 벌금 부과액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국토교통부는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한 민간투자 확대로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는 한편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어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5.04.28.

치안정책연구소와 한국셉테드학회 MOU체결 및 공동학술세미나 개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소(소장 정무관 양성진)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이 안전한 사회구축을 위해 범죄예방의 연구성과 및 기술 등의 정보교류, 이론과 실무의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2015년 4월 1일 경기도 용인 치안정책연구소에서 한국셉테드학회와 연구 및 학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식과 ‘셉테드의 지속적인 범죄예방 효과증대방안’에 관한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약식과 함께 이루어진 공동세미나에서는 셉테드 범죄예방효과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관리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주제발표와 지역별 범죄발생 위험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을 범죄지도화 하여 지역별 범죄위험성과 취약요소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개선함으로써 범죄예방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방안에 관한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2015.03.22.

부산시, 2015 범죄예방 안심마을 4곳 조성

심리적 안심과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부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2015년 범죄예방 안심마을 4곳'을 선정해 셉테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경찰·검찰, 부산디자인센터 및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셉테드 실무협의회를 겸한 대상지 선정심사를 거쳐 '동구 수정동', '부산진구 부암동', '동래구 칠산동', '사하구 신평동'을 2015년 셉테드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

5월 중순경 부산디자인센터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해 '범죄예방 안심마을'로 선정된 지역에 대한 범죄 유발환경조사, 주거환경조사, 사회·인구학적 조사 및 주민 직접 면접조사 등을 통한 지역 맞춤형 설계를 시작한다.

이어, 설계가 끝나는 대로 '큰길로 안내하는 유도선 표시', '공폐가 차단시설 및 출입방지 시설 설치', '주민공동이용을 위한 파고라 설치', '보안등, 반사경 및 소화기' 등을 시공하고 올해 말까지 조성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셉테드 사업은 구별 셉테드 원리에 입각한 성공 모델조성으로 향후 사업 기준을 제시했다. 지역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사전 의사반영과 사후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공동체와 연계한 지속가능한 셉테드 사업의 계기를 마련한다. 나아가 전문가 및 학생들의 재능기부와 자원봉사 확대로 사회공헌은 물론 예산절감을 이루기 위한 민·관·산·학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개선 전	개선 후
1) 건축물 정비 - 벽면 도색 - 안심 라인		
2) 공폐가 철거 - 안심마당 조성 (공동 건조대) - 소방시설 설치		
3) 대피로 조성 - 화장실 정비 - 조명 및 센서 안내방송		
4) 어두운 골목길 - 보안등 설치		

2015.04.28.

부산시, 국토부 추진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

근린재생형 6곳(영도구, 중구, 서구, 금정구, 강서구, 사상구) 신청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국 도시재생과

부산시는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에 근린재생형 총 6개소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린재생형중 중심시가지형 1곳(영도구), 근린재생형중 일반형으로 5곳(중구, 서구, 금정구, 강서구, 사상구)을 공모에 신청한다.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지는 ‘도시경제기반형’ 5개소, ‘근린재생형’ 30개소로 전국에서 총 35개소가 선정될 계획이며,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도시경제기반형은 총 사업비가 500억 원으로 국비 250억 원이 6년간 지원되며, 근린재생형은 총 사업비가 100~200억 원으로 국비 60~100억 원이 5년간 지원된다.

최종 사업대상지는 5월 중 평가를 실시해 6월 중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등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2015.04.27.

울산시, 국토부 추진 ‘2016 도시재생 공모사업’ 참여 도시경제기반형 등 6개 사업 신청

울산광역시 도시창조과

울산시가 정부의 2016년 도시재생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도시경제기반재생형 1개소’, ‘중구 근린재생형(중심시가지형) 1개소’, ‘근린재생형(일반형) 남구 1개소, 동구 2개소, 북구 1개소’ 등 총 6개소 사업을 4월 29일 신청했다.

2015.04.29.

세종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주민공청회 개최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도시재생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과

세종특별자치시는 17일 조치원읍사무소에서 세종시 도시재생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시행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백기영 영동대 교수와 정재희 홍익대 교수의 재생계획 설명에 이어 이우종 가천대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회와 주민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표된 도시재생 계획은 행정도시 건설지역과 원도심의 조화로운 성장을 통해 세종시를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활력도시로 만들어 주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로 재창조할 것을 제시했다.

세종시는 구도심의 문제점과 도시공간의 왜곡 등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도시의 잠재력에 대한 과학적 진단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조치원읍을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한 후 이달 말까지 ‘국토부의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사업’에 공모를 신청할 계획이다.

2015.04.20.



대전시, 원도심 활성화 시민 공모사업 프로그램 추진

대전의 원도심, 즐거움과 감동이 시작됩니다.

대전광역시 균형발전과

대전시와 대전문화재단은 원도심을 찾는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고,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기 위한 시민공모사업 프로그램을 17일부터 원도심 곳곳에서 다채롭게 펼친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된 시민공모사업은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153건을 선정하였으며, 올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음악 54건, 국악 30건, 일반예술 26건, 무용 13건, 연극 6건, 미술 5건, 문학 1건, 원도심 탐방 1건, 아트프리마켓 2건 등이다.

맨 처음 막을 올리는 공모사업 프로그램은 문화예술의 거리 대흥동상점가 상인회의 '우리들만의 음악회'이며, 같은 날 OK예술단의 '신나는 금요 가요한마당'이 펼쳐진다.

또한, 극단 광대세상의 '광대야 놀자' 공연을 시작으로 19일까지 연이은 프로그램으로 원도심을 찾는 시민들에게 감성과 활력을 찾아주고 원도심의 매력을 느끼도록 할 것이다.

2015.04.17.

서울시, 보편적 지원과 맞춤형 주거재생 실행방안 발표

전면철거 재개발 중심에서 개별 주택개량 지원과 지역맞춤형 재생으로 정책전환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 주거환경개선과

서울시가 지난 22일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마무리대책을 마발표한데 이어, 향후 주거재생정책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전체 면적의 절반이 주거지이고 이중 아파트와 도로, 공원과 뉴타운·재개발구역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저층주거지인데 20년 이상 노후화된 저층주거지가 72%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존 전면철거 재개발사업 중심의 재생정책에서 개별 주택개량 보편적 지원과 집단적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맞춤형 재생으로 정책을 전환한다.

「서울시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으로 개별 주택개량을 위한 공공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집단적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역맞춤형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108개 주거생활권 단위 주거재생 방향을 제시, 지역 맞춤형 재생방식을 적용하고, 전면 철거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은 '정비지수제'로 신중하게 재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주거, 산업, 문화 등 복합처방이 필요한 지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집중지원하며,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기존 가로를 유지하는 소규모 재개발을 추진하고, 기반시설 정비와 개별 주택개량을 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확대 추진 할 계획이다.

2015.04.27.



인천시,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국 주거환경정책과

인천광역시는 맞춤형 소규모 공공임대주택과 마을환경 정비를 동시에 추진하는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대상지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은 '중구 인현동 1-407일원', '동구 만석동 43-25일원', '남구 송의동 131-24', '주안동 263-2', '남동구 만수동 1-133일원' 등 5곳이다.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 사업은 인천시가 공공임대부족과 택지개발 등 신개발지역의 공급편중을 해소하고, 저금리 등으로 월세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서민의 주거안정이 필요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득수준 및 임대료를 감안해 소형 위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지역의 경제, 문화 특성을 고려해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유형을 다양화하는 새로운 사업이다.

시는 오는 6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해 2016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고, 이르면 2017년 상반기에는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마을환경 개선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2015.04.26.

울산시,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 착수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 방안 적극 모색, 5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착수

울산광역시 교통정책과

울산시는 2018년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따른 동해남부선 폐선부지¹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전문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관련기관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4월 8일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학술연구용역 계약에 대한 심의를 마쳤고, 4월 중순경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 총 3억 3900여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오는 5월 착수, 2016년 10월 완료할 예정이다.

주요 용역내용은 '폐선부지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 분석', '관련법령 검토 및 타 지역 사례조사 분석', '개발방향 설정, 도입기능 및 시설 등 기본구상', '개발대안 마련 및 타당성 분석', '사업개발방식 및 추진방안 도출, 재원조달 방안', '주민·전문가 의견수렴' 등이다.

울산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해당지역은 물론 모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폐선부지 활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15.04.15.

¹ 울산시의 폐선부지 규모는 연장 26.1km, 면적은 76만 8000㎡로 부산~울산구간은 12.1km, 41만 2000㎡이며 울산~포항구간은 14km, 35만 6000㎡



전남도, 주민 주도형 디자인마을 가꾸기 본격 추진 디자인으로 매력 있는 마을 가꾼다

전라남도 경관디자인과

전라남도는 16일, ‘주민주도형 매력 있는 디자인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민주도형 매력 있는 디자인마을 가꾸기’는 2015년 전라남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하드웨어적 지원 방식의 마을 가꾸기 사업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 위주의 행정 지원을 통해 마을 주민과 사회적 자본, 예술(기업, 예술 단체들)의 참여 및 협조로 지속가능한 매력 있는 마을로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전라남도는 17일 도청 수리채에서 스토리텔링 및 마을가꾸기 전문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 중 대상지를 선정해 6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는 재난지역이나 도심공동화지역, 관광지 주변지역 등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위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은 단계별로 추진되며,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의 문화와 정서가 묻어 있는 특화상품을 발굴한 후 발굴된 자원을 마을과 연계해 디자인마을 가꾸기 사업의 마스터플랜과 단계별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마을과 기업, 예술인, 지역 대학, 전문가들 간 자매결연을 통해 하드웨어 및 예술재능기부를 유도하여 본격적인 마을 가꾸기에 나선다.

2015.04.16.

충남도, ‘2015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대상지 선정 도내 6개 시·군 선정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충청남도가 공공디자인인 문화의 점진적인 확산으로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도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2015년 공공디자인 공모 사업’ 대상지에 도내 6개 시·군이 선정됐다.

전체 3개 분야에 걸쳐 진행된 이번 공모에서 도시 공공디자인사업 분야는 보령시와 태안군, 홍성군이 선정됐고,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분야는 서산시가 선정됐다.

농어촌마을 공공디자인 사업 중 희망마을 연계사업 분야는 서천군이, 일반시골마을 분야는 예산군이 최종 선정돼 3개 분야에서 총 6개 시·군이 공공디자인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올해 공모에는 도내 9개 시·군 10곳이 신청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는데 농어촌마을 분야 보다는 도시 공공디자인 분야의 신청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는 도시 공공디자인 사업에 각각 도비 1억 100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조성 사업에 6000만원, 농어촌마을공공디자인사업에 1억 4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시·군은 오는 9월까지 시·군 사업비 확보 및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주민과 전문가, 시·군 등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설계를 추진하게 된다.

2015.04.29.

부산시, '보도정비기본계획 용역' 시행

걷기 편한 보행자 중심의 보도조성

부산광역시 도로계획과

부산시는 '보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올 4월 시행, 보도관리의 기본틀을 세운다고 밝혔다.

보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도폭 불일치, 보도폭 협소, 보도 미설치, 노후 보도교체 구간, 무질서한 점용시설로 인한 보행불편구간 및 보행밀집 등 지역 특성을 중점정비구역 설정 등 정비계획에 의거 재정여건을 고려한 연차적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보도정비를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구간별 공사 시행, 보행통로 확보, 보행안전원 근무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토록 공사를 추진한다. 또한 시민들의 눈높이에 걸맞고 지역여건에 적합한 스토리텔링이 있는 보도를 조성하기 위한 보도공사 설계·시공·유지관리에 따른 매뉴얼을 재정비한다.

일부 시민들의 보도행정에 대한 불신요인의 하나인 '파고 또 파고', '예산 소진용 연말 공사' 등을 확실히 불식시키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보도 이력제, 보도교체 기준 마련, 도로관리심의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한 보도공사 기준을 마련한다.

2015.04.08.

부산시, '공장건축물 경관색 가이드라인' 제정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국 도시경관과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공장건축물 경관색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5월 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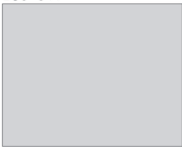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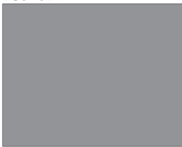
시는 지난 '09년 12월 「경관법」에 의거해 부산광역시 도시색채계획을 수립, 부산시를 대표하는 이미지색을 바탕으로 36가지의 도시경관색을 추출했다. '주조색 12색', '보조색 12색', '강조색 12색'으로 팔레트를 구성하고 수변권, 내륙권, 산지권인 권역별 건축물과 도시가로시설물, 교통시설물 등에 활용토록 홍보해 각종 개발계획, 기반시설, 경관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 시 색채기준으로 운영 중에 있다.

반면 공장건축물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아 이번에 공장건축물 경관색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부산시 전역의 공장건축물에 대해 적용하게 된다.

이번 '공장건축물 경관색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데는 한국색채학회 및 부산시 경관위원회 자문을 통해 부산시 경관색 중 공장건축물에 적합한 대표색과 권장색을 선정했다.

이후 공장건축물의 각종 심의운영, 건축 인·허가, 대단위 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어 공장건축물의 도시색채 개선효과와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공장건축물 경관색 권장범위는 YR~B, N, W의 다양한 색상의 색범위를 정했다. 경관대표색으로는 '은회색을 주조색'으로 '밝은 회색을 보조색'으로 '나뭇잎색을 강조색'으로 사용하도록 했으며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각 6색씩을 권장하고 있다.

대표 주조색	대표 보조색	대표 강조색
BSC-C11  은회색 N8.5	BSC-C21  밝은 회색 N7	BSC-C31  나뭇잎색 5GY 6/6

■ 공장건축물 경관색(대표색)

구분	팔레트					
선택가능 주조색	 흰색 N9.25	 밝은 은회색 N9	 은회색 N8.5	 우유색 5Y 9/1	 진주색 5YR 9/1	 백옥색 2.5G 9/2
선택가능 보조색	 밝은 회색 N7	 두릅색 5Y 8/4	 갈대색 2.5Y 7/4	 빙산색 5BG 8/4	 자황색 5YR 7/2	 밝은 은회색 N9
선택가능 강조색	 회갈색 5YR 6/1	 진디색 7.5GY 5/8	 흐린 하늘색 2.5PB 6/8	 나뭇잎색 5GY 6/6	 흙색 10YR 5/4	 하양 N9.5

■ 공장건축물 경관색(권장색)

2015.04.21.

부산시,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

도시계획·건축·교통분야, 미래학 등 인문분야 전문가 포함한 25명으로 구성

부산광역시 도시설계과

부산시는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제도'의 활성화 및 제도운영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도시계획·건축·교통·관광분야는 물론 인문사회분야 전문가를 포함 25명 내외로 구성되며, 도시계획위원회 등 법정 심의기구와는 다른 전문가 자문 그룹으로 복잡·다양한 부산시의 도시계획 정책요구에 부응할 예정이다.

정책자문단을 통해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제도'의 활성화와 더불어 도시계획 관련 신규정책·제도 발굴, 각종 정책제안 검토 자문, 각종 정책제안 검토 자문, 도시계획 이슈 및 대규모 개발사업의 실행력 제고로 행정낭비 최소화 등 그동안 도시계획과 관련해 제기된 다양한 개선과제에 대한 정책자문이 이뤄진다.

또한, 자문단은 도시계획이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 행정을 자문·지원하게 되며, 도시계획 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의 요청 시 자문 등으로 심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2015.04.08.



대전시,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축심의기준' 폐지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

대전시는 지난 2월 시작한 '도시·건축행정 규제 네거티브(negative) 정책'의 후속조치로 사업자(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공동주택 및 일반 건축물의 건축심의기준'을 폐지하고, '대전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안)'²을 새롭게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던 규제일변도의 기준들(공동주택의 길이는 4호 연립 또는 50미터 이하, 각 면의 벽면 율 40% 이상 확보, 지하주차장 설치원칙, 3개 층 이내에서 층수계획 등)은 과거의 뒀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대전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안)'은 5월에 최종안을 확정·시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인허가 부문에서 가장 문제가 되어 왔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확보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5.04.06.

² 심의기준(안) 주요내용 : 적용범위, 운영원칙,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심의대상, 심의의결 방법, 심의신청 및 제출도서, 안전 상정 등 심의절차 등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자료와 정책정보 및 학술연구정보 구축을 통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건축기본법」 발효 이후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기록자료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도시 문화 진흥을 위한 국내 건축자산 DB를 구축·서비스하고, 녹색건축물 활성화 및 건축 서비스산업 육성 등 건축정책 수립을 지원하며, 학술문헌 및 연구정보 구축을 통해 건축·도시분야의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31-90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B동 706-1호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architecture and urban policy information center, B 706-1, 230 Simin-daero,
Dongan-gu, Anyang-si, Gyeonggi-do, 431-908, Korea

(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